

국제심포지엄
4차 산업혁명과 사이버보험

본 자료는 2018년 11월 5일 중소기업중앙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국제심포지엄 『4차 산업혁명과 사이버보험』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CONTENTS

국제심포지엄

4차 산업혁명과 사이버보험

I. 개최 취지 5

II. 보험의 사이버-피지컬 시장으로의 전환 6

발표자: 권욱진 (St. John's 대학 교수)

III. 일본의 사이버보험 8

발표자: 도이 다케시 (MS & AD 시니어 매니저)

IV. 중국의 사이버보험 시장 현황 및 발전전략 10

발표자: 프랭크 왕 (Gen Re China 언더라이팅 디렉터)

V. 한국의 사이버보험 현황 및 정책과제 12

발표자: 임준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4차 산업혁명과 사이버보험

VI. 토론내용 요약	14
「강용석」 (SK인포섹 글로벌사업본부 본부장)	14
「김성호」 (보험개발원 손해보험부문 부문장)	14
「김종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보보호연구본부 프로젝트리더)	15
「심현우」 (한양대학교 보험계리학과 교수)	16
「최용민」 (한화손해보험 상무)	17
「권옥진」 (St. John's 대학 교수)	18
「도이 다케시」 (MS & AD 시니어 매니저)	19
「프랭크 왕」 (Gen Re China 언더라이팅 디렉터)	19
「임준」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19

I. 개최 취지

- 인공지능, 블록체인, 사물인터넷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에 의해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빠르게 디지털화되고 있음
 - 또한 인터넷과 결합되면서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물과 사물 간에, 그리고 사물과 사람 간 연결성이 확대되고 있음

- 이처럼 초연결사회(Hyper-connected Society)로 진화해감에 따라 사이버위험의 성격도 변화하고 있음
 - 과거에는 개인정보 유출에 의한 프라이버시 피해가 주를 이루었으나 점차 물리적 피해를 수반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음

- 사이버 사고가 물리적 피해를 수반할 경우 정상적인 영업활동이나 일상적인 생활의 영위가 어려워져 빠른 피해복구가 중요해졌음
 - 이로 인해 피해복구 자원조달을 위한 위험재무 수단의 하나로 사이버보험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하고 있음

- 그러나 아직 국내에서는 사이버보험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국제심포지엄 개최를 통해 주요국의 경험에 대해 듣고 국내 보험산업 및 정책당국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

II. 보험의 사이버 - 피지컬 시장으로의 전환

권육진 (St. John's 대학 교수)

1. 사이버위험의 특성

-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2018년 글로벌 위험 보고서에 의하면, 사이버위험은 가능성(Likelihood) 측면에서는 3위, 영향(Impact) 측면에서는 6위를 기록하였음
 - 한편, 로이즈는 사이버 공격에 의한 전 세계 피해규모가 약 36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였음

- Romanosky(2016)가 미국의 사이버 사고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평균 피해비용은 약 784만 달러였음
 - 반면, 중간값은 약 25만 달러로 평균값과 중간값 간에 상당한 차이를 보였음
 - 평균값과 중간값이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사이버 사고의 분포가 다수의 소규모 피해와 소수의 대규모 피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임
 - 분석 대상 샘플의 최대 피해액 규모는 약 7억 5천만 달러였음

- 데이터의 부족 등에 의해 사이버 사고 원인 및 피해 유형별로 세분화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2. 미국의 사이버보험 시장 현황

- 단독형(Stand-alone) 사이버보험의 수입보험료는 2011년 5억 달러에서 2015년 15억 달러로 증가하였음

- 현재 46개 주에서 정보유출사고 신고 의무화를 도입하고 있는데, 2015년 기준 신고 건수는 1,370건임

- 산업별 사이버보험 시장 규모를 살펴보면, 금융, 유통, 의료 등의 분야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 2015년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할 때, 금융 분야가 29%, 유통 분야가 21%, 그리고 의료 분야가 15%를 기록하였음

- 사이버보험 손해율은 2016년 기준으로 약 61.4% 정도임

3. 사이버보험 시장 전망 및 과제

- 주요 기관들은 향후 전 세계 사이버보험 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 PWC는 202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21%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였고, Aon은 44%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음

- 향후 보험상품의 발전방향과 관련해서는 사고 원인 및 피해 유형별로 세분화된 보험상품이 등장할 것으로 보임

 - 현재는 모든 유형의 사이버위험을 하나의 상품을 통해 보장하고 있는데, 전통적인 보험의 경우처럼 점차 세분화될 것임

- 한편, 사이버보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험약관의 용어 등을 표준화하는 작업이 필요함

 - 보험회사, 브로커 등을 대상으로 인터뷰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보험회사별로 보험약관의 용어 정의가 상이하였음

III. 일본의 사이버보험

도이 다케시 (MS & AD 시니어 매니저)

1. 사이버 사고 동향

- 일본 경찰청의 사이버 범죄 보고서에 의하면, 2013년 약 8만 4,863건이던 사이버 범죄 건수가 2017년 약 13만 건으로 증가하였음
 - 사이버 범죄 유형 가운데 인터넷 사기(Fraud)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음
- 인터넷 बैं킹 관련 불법 송금(Illegal Remittance) 규모는 감소추세에 있음
 - 2014년 상반기 약 18.51억 엔에서 2018년 상반기 3.72억 엔으로 감소하였음
- 특정 대상을 목표로 한 사이버 공격(Targeted Attacks)은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2013년 492건에서 2017년 6,077건으로 증가하였음

2. 사이버보험 시장 현황 및 MS & AD의 사이버위험 평가 시스템

- 일본의 사이버보험 시장 규모는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 2014년 약 105억 엔이던 사이버보험 수입보험료가 2017년 약 188억 엔으로 증가하였음
- MS & AD는 여러 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사이버보험 가입 기업에 사이버위험 평가 및 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사이버위험 평가와 관련해서는 Verizon, Bitsight 등과 협력하고 있고, 사이버위험 통제 및 예방과 관련해서는 NEC, Insights 등과 협력하고 있음
- MS & AD는 사이버보험 가입 단계에서 가입 기업의 사이버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 Verizon에서 개발한 설문지를 활용하고 있음
- 또한, 인터넷상의 다양한 정보를 활용해 가입 기업의 사이버위험을 평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작업은 Bitsight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지고 있음

3. 중소기업 대상 사이버보험 설문조사 결과

- 2018년 9월 26일부터 10월 12일에 걸쳐 일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이버보험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약 1만 개의 기업에 설문지를 보냈으나 664개 기업만이 설문지에 응답하였음
- 조사 대상 기업 가운데 12.3%만이 현재 사이버보험에 가입하고 있었음
 - 10.4%는 가입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나머지 77.3%는 가입 계획조차 없었음
- 사이버보험 가입 계획이 없는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 35.6%가 사이버보험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음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이버보험 관련 홍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
- 중소기업이 희망하는 사이버보험의 담보 1순위는 배상책임(Liability)으로 63.0%의 기업이 원했음
 - 두 번째는 복구비용으로 58.6%를 기록했는데, 중소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복구비용의 상대적 중요성이 증가하였음

IV. 중국의 사이버보험 시장 현황 및 발전전략

프랭크 왕 (Gen Re China 언더라이팅 디렉터)

1. 사이버 사고 동향

- 미국의 정보보안 회사인 시만텍(Symantec)에 의하면, 2017년 랜섬웨어 공격 건수를 기준으로 할 때, 중국은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하였음
 - 또한, 이메일 가운데 스팸 이메일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볼 때도 중국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2위를 기록하였음
- 모바일 사이버 사고의 경우에는 전체 사고의 절반 이상이 미국에서 발생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음
 - 인도가 11%, 독일이 9%였으며, 중국은 2%의 비중을 차지하였음
- 사물인터넷에 대한 공격은 2016년 약 6천 건에서 2017년 약 5만 건으로 증가하여 약 600%의 증가율을 보였음
 - 공격의 근원지로는 중국이 2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이어서 미국이 11%, 브라질이 7%, 러시아가 6%의 비중을 차지하였음

2. 법적 환경

- 2017년 6월 1일부터 사이버보안법(Cybersecurity Law)이 시행되었는데, 사이버 공간에서의 프라이버시 및 보안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첫 번째 법률임
 - 사이버보안법에는 네트워크 사업자의 의무 및 책임,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에 대한 보호 규칙,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안 규칙 등이 명시되어 있음

- 중국의 경우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포괄적인 법률인 개인정보보호법은 아직 존재하지 않음
 -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빠르면 2020년경에 제정될 것으로 보임

- 2017년 8월 16일 사이버 법원이 설립되었으며, 주요 업무는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한 사건의 소송을 처리하는 것임
 - 접수 건수는 2018년 10월까지 약 1만 1,600건 정도 되었으며, 건당 평균 처리 시간은 약 28분 정도 되었음

3. 가계성 사이버보험

- 개인은행계좌손실보험(Individual Bank Account Loss Insurance)
 - 계좌 및 비밀번호가 도용, 불법복제, 협박에 의해 유출되어 발생하는 손실을 보장함
 - 배상한도는 3만 위안부터 88만 위안이고, 보험료는 1년에 48~1,408위안임

- 사이버가상재물손실보험(Cyber Virtual Property Insurance)
 - 온라인게임의 계정, 장비, 아이템 등이 도용 및 해킹에 의해 손실을 볼 경우 보상함
 - 중국태평양손해보험회사가 중국온라인게임서비스연맹과 함께 개발하였음
 -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보험금 청구도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 모바일결제보상보험(Mobile Payment Protection Insurance)
 - 모바일결제서비스 이용자 대상 보험으로, 2014년 처음으로 출시되었음
 - 모바일 바이러스에 의한 금전적 손실을 보상함
 - 사고 건당 보상한도는 3천 위안이고, 1년간 총 한도는 10만 위안임
 - 중안보험회사와 모바일결제서비스 사업자인 바이두가 공동으로 개발하였음
 - 보험료는 모바일결제서비스 사업자인 바이두가 부담함

V. 한국의 사이버보험 현황 및 정책과제

임준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1. 기업시장

- 국내 사이버보험 시장은 공급 측면 및 수요 측면의 여러 제약요인에 의해 보험가입률이 저조한 상황임
 -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제3자 피해보상수단 마련 의무화를 중심으로 사이버보험 정책이 추진되어 왔음
- 주요국의 경우에는 공급 측면은 사이버 사고 데이터 표준화 및 집적, 수요 측면은 사이버위험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음
 - 아직까지는 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의무화 도입이나 직·간접적인 보험료 지원 제도의 시행 사례가 존재하지는 않음
- 향후 시장상황의 변화 등으로 인해 의무화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힐 경우 재보험풀이나 인센티브제도 도입과 같은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사이버위험과 비슷하게 LPHI(Low Probability and High Impact)의 특성을 보이는 홍수보험의 경우 보험제도의 건전성도 유지하면서 보험 가입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세제지원 등의 인센티브제도 도입이 논의되고 있음

2. 가계시장

-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대다수의 소비자가 가계성 사이버보험 상품의 판매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

- 사이버 금융범죄 관련 보험상품의 경우 응답자의 약 8.4%만이 판매 사실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음
- 현재는 가계성 사이버보험이 주로 특약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데, 설문조사를 통해 단독형에 대한 잠재적 수요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사이버 금융범죄 보험상품의 구입 의향을 밝힌 응답자 가운데 약 47.9%가 특약형 대신 단독형 상품을 선호하였음
- 단독형 상품의 경우 수수료 문제로 인해 설계사 채널을 통해 판매하기는 어려운데, 부가상품의 형태로 판매하는 것이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음
 - 이 경우 소비자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험에 가입되는 등의 소비자보호 이슈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투명한 정보 제공 등의 소비자보호 장치 마련이 필요함

3. 공공부문

- 공공부문의 경우 대량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나 혁신적인 활용에 있어서는 미흡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공공데이터 개방 운동이 전개되었음
 - 국내에서도 2013년 '정부 3.0'이라는 제목으로 공공데이터 개방 운동이 추진되었음
- 그동안의 국내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을 평가해보면, 개방 및 활용 측면에 비해 위험재무 전략 측면의 논의는 상대적으로 미흡하였음
 - 2015년 11개 분야의 공공데이터 개방을 시작으로, 2017년에는 29개 분야로 확대되었음
- 보다 적극적인 개방을 위해서는 위험재무 전략이 병행되어야 하는데, 민영보험회사로의 위험 전가가 어려울 경우 위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공부문이 보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공공부문의 위험보유 방안으로 자기보험과 정부지원 재보험을 생각해볼 수 있음

VI. 토론내용 요약

「강용석」 (SK인포섹 글로벌사업본부 본부장)

- 보험산업에서 사이버위험 평가 틀을 만들 때 정보통신기반시설(Critic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사례를 참고하면 좋을 듯함
 - 정보통신기반시설의 경우 법에 의해 취약점을 점검하고 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매우 상세한 프로세스가 이미 만들어져 있음
- 보험회사가 사이버위험 평가 프레임워크를 만들 때 점검항목에 예방활동 뿐만 아니라 탐지활동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예방은 사전에 취약점을 점검하여 위험관리 시스템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활동을 의미하고, 탐지는 모니터링을 통해 사이버 공격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히 대응하는 활동을 의미함
 - 사이버 공격의 경우 외부에서 공격하는 방법도 있으나 요즘은 내부에 에이전트를 심어 놓고 공격하기도 함
- 사이버보험의 경우 민간 자율에 맡길 것인지 아니면 의무화할 것인지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 북한발 해킹과 같은 경우처럼 국가 혼란을 야기할 목적의 사이버 사고와 관련해서는 공공성에 입각한 접근이 필요함

「김성호」 (보험개발원 손해보험부문 부문장)

- 미국의 사이버보험 시장은 매년 고성장을 지속해 가고 있으나 한국은 약 300~400억 원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음
 - 한국의 보험수요는 의무보험 위주이고, 담보의 범위 역시 사이버 리스크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의무보험의 영역인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배상책임 중심임

- 다만, 2018년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확대된다는 점에서 사이버보험 시장이 한 단계 더 커지므로, 이를 통해 제3자(3rd Party)와 당사자(1st Party)를 아우르는 보험수요의 진작 가능성도 예상해볼 수 있음
- 사이버보험 공급 측면에서 사이버 리스크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는 해외나 우리가 공히 겪고 있는 공통적인 난관임
 - 경험 데이터가 부족하고 위험의 형태나 침해를 야기하는 방법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위험의 양상과 관련 기술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학계, 인터넷진흥원 등과 협업을 통해 사이버 리스크 평가모델 구축을 진행해오고 있으나 손해정보와 리스크를 분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임
 - 일본 사례의 경우 보안업체인 BitSight나 Version社와 협력을 통해 내·외부 위험요인을 평가하고 활용하는 점이 흥미로움
 - 다만, 보안 쪽의 관점은 공격 속성과 시스템 취약점을 파악해서 사고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주된 목적일 텐데, 협업에 따른 운영성과와 과거 데이터(Historical Data)가 어떻게 활용되었는지에 대해 추가로 벤치마킹해보았으면 함
- 미국 NetDiligence나 ISO 사례, 유럽의 Insurance Europe의 사례와 같이 우리도 민관이 협력해서 사고 경험 데이터 활용의 관점에서 사고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집적·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김종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보보호연구본부 프로젝트리더)

- 국제 표준화기구 ITU-T SG17 회의에서 사이버위험에 대한 표준화 개발이 논의되고 있으며, 사이버보험에서 표준화 이슈는 중요하다고 생각함
- 가입자 입장에서 사이버위험뿐만 아니라 사이버보험의 용어, 약관 등 관련 보험 질문지 등의 표준화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함
 - 업체마다 질문지가 다르고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상 범위, 사고 유형 등을 정의하는 업계 표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두 번째로는 사이버보험 활성화를 위해 업계 이해관계자 간의 데이터 공유가 필요해보임
 - 보험회사가 사이버보험 판매를 고려할 때, 직면하는 어려움으로는 경험 데이터의 부족, 사이버 공격의 진화, 잠재적인 추가 손실, 사이버위험에 대한 협소한 시각 등이 있음
 - 따라서 사이버상의 잠재적인 손해와 피해액을 예측하기 위해서 관계기관 간의 데이터 공유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세 번째로, 사이버 취약성을 정량화할 수 있는 기존의 점수화 시스템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사이버 취약성을 정량화할 수 있는 표준화된 점수화 시스템이 존재하며,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사이버보험 요율을 산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마지막으로, 보험업계 종사자와 정보보안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사이버 위험 인수 방법 또는 사이버보험 상품을 개발하면 좋을 것 같음

「심현우」 (한양대학교 보험계리학과 교수)

- 사이버보험 상품 약관의 용어 등을 표준화하고 사이버위험을 세분화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출시된 보험상품의 경우 약관의 용어 등에 있어서 표준화가 미흡하여 소비자가 상품을 비교·선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국가 공인기관 등의 주도하에 사이버보험 상품의 약관을 표준화하는 작업이 필요함
 - 사이버위험의 경우 모든 사고가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유형별 위험 분석 및 위험 관리가 필요함
 - 스팸이나 바이러스에 의한 사이버 사고와 해커의 침입에 의한 사이버 사고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른 접근이 필요함

■ 보험상품 개발에 활용될 수 있는 사이버 사고 데이터의 집적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업할 필요가 있음

- 컨설팅 업체, 사이버보안 업체, 경찰청 등에서 사이버 사고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으나 사이버보험 요율 산출 등에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컨설팅 업체와 사이버보안 업체가 수집한 데이터의 경우 전체를 대표하는 표본이 아니고 조사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어 있으며, 경찰청의 사고 통계는 거시적인 기초통계임
- 데이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계리사, 통계청, 보안 전문가 등의 협업을 통한 사이버상의 데이터 수집을 생각해볼 수 있음
- 단,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 이슈가 야기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정보보호 규제기관의 역할 분담 및 재정립이 필요함
 -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기관과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기관을 분리·독립시켜 역할 분담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함
 - 현재 개인정보 관련 감독기관이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나누어져 있고, 네트워크 감시기관으로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 등이 있는데, 업무가 중복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함

■ 사물인터넷의 경우 전통적인 네트워크에 비해 사고 발생 가능성 및 위험 전이 속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사물인터넷의 위험관리 수단으로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함

「최용민」 (한화손해보험 상무)

■ 사이버보험 시장 활성화를 위해 업계 차원에서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중소기업 대상 사이버위험관리 컨설팅 표준화임

-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사이버위험 평가 및 관리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컨설팅이 필요함
 - 예를 들어, 당장 내년에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가 사이버보험 의무가입 대상자가 되는데, 이들을 위한 사이버위험관리 가이드라인이 없음
 - 보상한도액, 자기부담액, 예상 피해규모 등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업계가 협력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보험회사의 사이버위험관리 컨설팅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사이버보안 업체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됨
 - 업계 차원에서 공동으로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음
- 일정 수준까지는 중소기업의 보안체계 강화를 통해 위험을 관리하고, 그 이상의 위험은 보험업계로 전가하는 방향으로 유도해야 함

■ 두 번째는 보험가입 및 보상과 관련된 프로세스의 표준화임

- 국내 보험회사들이 사이버보험상품 도입을 위해 글로벌 재보험사들과 접촉하였는데, 재보험사마다 가입 질문서가 질적·양적으로 상당한 차이를 보였음
 - 사이버보험상품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업계 차원에서 통합하는 작업이 필요함
- 국내의 경우 사이버보험과 관련하여 보험금 지급 경험이 거의 없으며, 보상 프로세스가 체계화되어 있지 않음
 - 포렌식이나 사이버보안 전문가를 통한 체계화된 보상 프로세스의 표준화 마련을 위해 업계 공동의 노력이 필요함

■ 세 번째는, 해외 사례를 참고할 때, 기업의 사이버위험 인식 제고를 위해 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업계가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권욱진」 (St. John's 대학 교수)

- 개별 보험회사 차원에서 사이버 사고 데이터를 집적하고 위험평가 모델을 개발하기는 쉽지 않음
 - 사이버 사고 데이터를 집적하고 사이버위험 평가모델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많은데, 이러한 회사들과의 협업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함
 -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통신업체, 보험회사 등이 참여하는 CyRim 프로젝트를 통해 사이버 사고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을 진행 중인데, 한국도 싱가포르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도이 다케시」 (MS & AD 시니어 매니저)

- 사이버보안 업체인 BitSight와 Verison社와의 협력을 통해 MS & AD가 얻을 수 있었던 주요 성과 가운데 하나는 사이버보험 가입 기업에 사이버보안 관련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점임
 - 고객 기업은 사이버위험 평가 보고서를 통해 자신의 취약점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고, 보완할 수 있어서 관련 서비스에 만족하고 있음

「프랭크 왕」 (Gen Re China 언더라이팅 디렉터)

- 사이버위험 평가도 중요하지만 사이버위험 인수 전략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음
 -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으로 구분하고, 저위험군부터 조심스럽게 인수하는 전략의 채택이 필요함

「임준」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오늘 발표는 주로 수요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향후 공급 측면에 대해 연구하게 된다면, 우리와 경제 규모가 비슷하거나 작은 국가에 초점을 맞추어 계획함
 - 싱가포르가 하나의 벤치마킹 사례가 될 수 있음

국제심포지엄
4차 산업혁명과 사이버보험

발행일 | 2018년 12월

발행인 | 한기정

발행처 | 보험연구원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여의도동 35-4)

연락처 | 02-3775-9000

인쇄처 | 경성문화사 / 02-786-2999

Copyright@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